

# 광주매일신문



제7305호 대표전화(062) 650 - 2000 **Kjdaily.com**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음력 9월 11일)

사의 중심이었다. 살기 좋은 '풍요의 고

장이자 미향', 문화와 예술을 꽃피워 낸

'예향', 의병활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을 펼친 '의향'이었다"면서 "민선7기가

출범한 올해를 '새천년 호남 도약'의 원

년으로 삼고, 광주·전남·전북이 화합과

/임채만기자 icm@kjdaily.com

상생의 길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천년 소망 담은 타임캡슐 1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에서 열린 '전라도 1천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 3개 광역단체장과 주요내빈들이 새천년에 바라는 전라도인의 소망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타임캡슐에 넣고 있다.

# 광주·전남·북 '새 천년 향해 상생 협력'

## 전주서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식'…1천여명 참석 국정과제 호남권 발전계획 반영 한목소리 내기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18일 전라 도의 한 뿌리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천년 을 향해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 광 역자치단체는 이날 전주 전라감영 일원 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식'을 개최 했다.

천년 기념식은 '천년의 자긍심, 새로 운 천년을 향한 웅비!'를 주제로 기념사, 주제영상 상영, 기념식 퍼포먼스, 전북 도립국악원의 주제공연으로 이어졌다.

전라도라는 이름이 명명된 1018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기념일을 2018년 10 월18일로 정했다.

기념식이 개최되는 전라감영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의 정치·경제· 문화·사회 중심지이자 전라도 최고의 지방통치 행정기구였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 영록 전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 해 시·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송하진 전북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전라도는 임진왜란 당시의병 활동, 동학농민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결연히 일어나 시대정신을 이끌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융성했던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천년의역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3개 시·도와 함께 천년의 빛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광주 희경루 복원,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사업을 추진 해 후손들에게 전라도 천년 유산으로 남

김영록 지사 '전라도 정도 천년' 특별기고 ▶5면

겨줄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의로운 역사를 가진 전라도가 잘 살아야 '정의가 풍요를 창출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천년 후후손들에게 오늘이 자랑스럽고 빛나는역사가 될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풍요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부터 호남권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에너지밸리 조성, 한전공대 및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와는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광주·전북과의 상생 발전 협력과제로 서해안(군산-목포) 철도 개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교통편 증편,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등을 협력 추진하고 중앙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라도 천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전라도는 늘 한반도 역

## '지역균형' 반영 못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 대형 국책사업 여전히 '경제성'이 좌우 장병완, 한국개발원 조사 189건 분석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남갑)이 18일 2001-2018년까지 189건의 한국개발원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결정시 지역균형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대부분 경제성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 시행 전 의무적으로 타당 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경제성 만으로 평가해 수도권 집중, 지방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종합평가 방법'을 통해 '경제성' 항목에 추가로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항목을 포함시켜 종합적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균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경제성이 사업 시행의 지배적 영향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다.

장 의원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189건 가운데 경제성이 사업시행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 사업은 181건으로 이를 벗어난 것 은 8건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하다"면 서 "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치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 점수가 최종 사업 시행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점수에 미치는 통계적 상관관계도 0.754로 나타났는데 장 의원은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미친다는 과학적 증명"이라며 "결국 경제성이 전체 평가 점수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의 항목별 가중치 중 경제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인데장 의원은 "예타 종합평가는 100점 중 50점을 넘으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항목 중 경제성 항목의 최대치가 50%"라면서 "극단적으로 경제성이 최대 값인 50점을 받으면 '지역균형', '정책성'을 0점 받아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개발 원 최정표 원장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 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부분 SOC 사업으로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경제성만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바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를 경제성을 줄이고 지역균형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jskim@kjdaily.com

## 좌초 위기 광주형일자리 활로 촉각

### 市·노동계, 질의·응답 형태 사실상 대화 재개 '市 답신' 내용따라 勞 복귀 여부 판가름 날 듯

광주시가 현대차 투자합작 완성차 공 장 협약 성사를 위해 노동계 설득에 공 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공문을 통한 질 의응답 형태로 사실상 대화를 재개하는 등 좌초 위기에 처한 광주형일자리가 활 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9개 질의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가질의를 보내 일단 대화의 끈을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결국 연일 노동계를 향해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있는 광주시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광주형일자리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광주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전날 광주시에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 공문에 대한 답변 및 추가질의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이 보낸 공문에는 광주시의 답변에 대해 실망감과 부실함으로 불만 을 표출하면서 추가질의사항을 담았다. 추가 내용은 ▲광주시의 협상 요구안 ▲완성차 공장의 운영주체 ▲투자자가 기

▲관정자 중정의 군영구세 ▲구자자가기 업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의 근거 와 사례 ▲투자유치 로드맵 등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현대차 투자유치 관련 광주시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며 "감출 내용이 그렇게 많다면 애초부터 노동계와 함께 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모든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협상의 부실함은 물론, 질의에 대한 이해조차 못하는 것으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또 "광주시 요구가 무엇인지 묻는 답변에 광주시의 요구가 무엇이었 는지 단 한 줄도 없이 '협상 중'이라고 답변돼있다"며 "이미 수개월 전 광주시 에서 밝힌 내용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 간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폐지해 사회적 합 의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새로 운 방안을 강구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시가 현대차에서 했던 것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답신에는 우리가 요구한 사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연봉 3천500만원에 대한 내용도 변동성 급여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답신을 보낼 방침 이다. 또 추가 질의에 대한 답신에는 합 작법인의 운영주체를 현대차가 아닌 신설 법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세부 근로조건은 경영수지 분석 등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담을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대차와 협상을 계속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 담보 때문"이라며 "신설법인을 설립한 이후 적자가 나거나 망하게 되면 어렵게 만든일자리가 날아가는 것으로 타·시도에도전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상황에서 노동계가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총 관계자가 직접 만나자는 요청을 하면 광주시는 시장, 부시장, 실장 누가 됐건 다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소통창구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장연주(정의·비례)의원이 현대차 완성차 공장과 관련 노동계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자 "노동계가협상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공문으로 공개하라고 하고, 공개하니까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노동계도 결자해지 하는 자세로 협상단에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노동계의 복귀를 다시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민선 6기 말 시작된 노사민정 대 타협을 전제로 한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 이 될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협상 과 정에 노동계 배제, 협상내용 비공개 등 의 이유로 지난달 19일 한국노총 광주지 역본부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김다이기자 ssdai@kjdaily.com

